

원희룡 장관, 부산역에서 코레일 노조 파업 대비 상황 점검

- 노조의 이기적이며 명분없는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부산역을 방문해 지난 24일(목)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태업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12월 2일(금)부터 예정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였다.
- 코레일 노조는 철도통합을 요구하고, 관제·시설유지보수 이관 등을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지난 21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2일(금)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확정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버스업계와 협력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률 감소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대체 수송수단 증편 방안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조속히 태업을 종료하고,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와의 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와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 원 장관은 "전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총파업에 이어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 "철도는 코레일의 것도, 노조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으로, 국민의 세금과 이용자의 요금으로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연이은 사고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장병 등에 대해 코레일 노조가 야영을 요구하며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대신 야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파업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원 장관은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으며, 연이어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안전 업무의 국가 이관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는 정부도 귀담아 듣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 노조가 반복되는 안전 사고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없이 예산과 인력부족 등 일관되게 정부탓만을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아무런 근거없는 민영화를 내세워 국민안전과 이동권을 불모로 잡고 자행하는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2.11.27.

국토교통부 대변인